

景氣變動과 分配 및 貧困間 動態的 關係*

安鍾範** · 林炳仁*** · 石相焄****

논문초록

본 연구는 『도시가계조사』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성장률탄력성을 측정하고, 경기변동이 계층별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은 경제위기로 인해 예외적으로 감소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추세는 소득계층별과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둘째,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은 경기순응적(pro-cyclical),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 소득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 양상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효과가 빈곤계층까지 확산되었다. 셋째, 최저소득계층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전략이 소득분배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핵심 주제어: 쿠즈네츠 가설, 성장과 분배, 소득점유율과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 경기변동과 빈곤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H0, D3

* 본 논문의 완성에 큰 도움이 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cban@skku.edu

*** 제2저자,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e-mail: billforest@hanmail.net

**** 제3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good@skku.edu

1. 서론: 빈곤 및 분배 연구의 새로운 접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져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를 가장 적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도 8.36으로 관련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통계청, 2006a).

우리사회에 이와 같이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의 문제를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발생원인과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양극화 현상을 과거 불균형 압축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이 저해되어 발생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이 지속되면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 대 분배’라는 대립적 시각보다는 ‘분배를 통한 성장’이라는 좀 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청와대, 2006). 이에 반해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극심한 경기침체와 성장을 저하로 촉발되었으며 이후 성장잠재력이 복원되지 못함에 따라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소득분배 상황은 경제위기 이후 악화되었지만, 그 정도는 1980년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국가별 비교에서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성장’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06b; 선진화국민회의, 2006; 강석훈, 2006).

이러한 양극화 논쟁으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을 극소화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성장과 분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고전적으로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분배의 불평등도가 악화되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선된다는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Kuznets' Inverted-U Hypothesis)” 검토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검증 작업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들을 종합하면 분석 대상 국가와 시기에 따라 역U자 가설이 성립하거나 반대로 U자에 가까운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고전적 쿠즈네츠의 방법론으로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분배 상태를 개선시키거나 또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경제위기가 경제침체기에는 예외 없이 실업이 양산되어 빈곤을 심화시키고 분배 상태를 악화시켜 왔다. 이러한 사실은 성장과 분배의 관계가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성장과 분배가 갖는 일률적인 관계에 주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는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변수의 수준(level) 자체로써 분석함으로써 연도별 변화에 따른 변화의 정도(rate of change)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나 국내총생산의 수준 그 자체를 대응기간의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 그 자체와 연계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라 할 수 없다. 성장이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의 경제수준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분배관련 지표도 시점간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정태적(static)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의 동태적(dynamic) 변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방법으로 변화를 개념을 응용한 계층별 소득점유율 및 빈곤율에 대한 성장률탄력성을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산출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계층별 실질소득의 변화를 동태적인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으로 계산한 성장률탄력성의 결과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평균소득으로 측정한 탄력성의 결과를 비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경제성장과 분배, 경기변동과 빈곤 및 분배, 더 나아가 양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개괄한 뒤 계층별 소득분배 구조를 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추이로 살펴본다. IV장에서는 분위별 소득점유율의 성장률탄력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어서 절대빈곤 개념에 근거한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 추정결과를 논의한다. 또한 거시경제변수와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분석내용들을 요약하고 그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기존 연구

국내외 기존 연구들은 경제성장과 분배, 경기변동과 빈곤 및 분배 그리고 양극화의 세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쿠즈네츠(Kuznets, 1963)에 의해 최초로 정형화되었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초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분배구조가 악화되지만 나중에는 근대산업이 대부분의 인구를 포용하게 되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 작업은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Kravis(1960), Adelman and Morris(1973), Paukert(1973), Ahluwalia(1976) 등의 연구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Kuo, Ranis and Fei(1981)의 연구 그리고 각 국가별 표본에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한 Papanek and Kyn(1986)의 연구와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Tsaklogou(1988)의 연구 등은 쿠즈네츠 가설이 성립함을 보였다. 이에 반해 Saith(1985)는 Ahluwalia(1976)가 몇몇 관측치를 제외하거나 추가함에 따라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사용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역U자 가설이 성립한다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Fields(1980)는 각 국가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였으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는 역U자 가설이 성립하지 못함을 보였다. 또한 Fields(2000), Fields and Jakubson(1994)은 국가별 패널자료에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소득과 불평등도 간의 관계는 역U자라기보다는 오히려 U자 형에 가깝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살펴본 Förster and d'Ercole(2005)은 1980년대 중반까지 그리스,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소득분배가 개선된 나라도 있고, 미국과 영국처럼 소득분배가 악화된 나라도 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는 많은 나라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 중 쿠즈네츠 가설 검증을 시도한 안종범(2003)은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분배 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없었고, 대신 인적자본 수준, 개방화, 고령화 등의 요인이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으로 경기변동과 빈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Ellwood(1988), 금재호·김승택(2001) 등을 들 수 있다. Ellwood(1988)는 미국 사회에서 아동이 있는 부부가족이 빈곤해지는 원인으로 경기변동과 저임금, 노동시장 유연화 때문임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금재호·김승택(2001)은 경제위기 이후 매년 20%정도의 가구들이 빈곤상태에 놓여 있지만 경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 빈곤가구의 비중이 높고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경기변동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준영·이광호(2004)는 우리나라

라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인 1998년 1분기를 기점으로 경기변동과 소득분배 간에 구조적 변화를 겪었고, 양(+)의 경기변동 충격이 경제위기 이전에는 소득분배를 개선시켰지만 경제위기 이후에는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가 활발한 양극화¹⁾와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강석훈(2006)은 분석기간(1979년~2005년) 중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양극화지수(ER지수)의 상관계수는 0.9458로 매우 높으므로 소득양극화 지수의 변화패턴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분배상태와 유사하다는 사실과 최근의 현상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분배의 악화현상이라는 일반적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강석훈(2006)의 분석결과, 소득분위별 소득비중의 연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는 10분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수는 1분위가 0.657로 가장 높게, 2분위는 0.5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3분위부터 8분위까지는 대체로 0.5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9분위와 10분위의 상관계수는 각각 0.462와 0.278이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라 가장 고통을 크게 받는 계층은 1분위 계층이며 상대적으로 10분위 계층은 경제성장률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빈곤층 소득점유율 하락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유 외(2006)는 성장과 고용, 고용과 복지간 연계 고리가 단절되고, 세계화, 기술 변화, 구조조정 등과 같은 환경 변화로 인하여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성경제연구소(2006b)는 통계청의 『도시가지조사』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인 Wolfson지수와 ER지수²⁾를 산출한 결과, 1984년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10여년간 소득양극화 현상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동 기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 때문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실제로 Wolfson지수와 ER지수는 1993년 각각 0.25와 0.018이었지만 경제위기 직후

1) 양극화란 특정 분포, 특히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둘로 나눌 때 양집단의 집락성이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킨다. 상위집단의 하위분포와 하위집단의 상위분포로 대표되는 중간층이 보다 극단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분포가 각기 중간값 주변으로 몰리는 방식으로 동질성이 커질 경우에도 양극화는 심화한다. 따라서 양극화 지표는 주어진 소득 분포에서 잠재적 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긴장·갈등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전병유 외 2인, 2006).

2) Wolfson 지수와 ER(Esteban & Ray) 지수는 모두 중간 계층의 축소와 특정 부분으로 소득이 밀집 현상을 반영한 지표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 1998년에는 각각 0.28과 0.021로 모든 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후 2000~02년 사이에 각각 0.27과 0.02 수준으로 하락하다가, 2003년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6b).

강석훈(2006)과 삼성경제연구소(2006b)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경기 확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 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80여개 나라에 대해 약 40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Dollar and Kraay (2002)는 평균소득의 증가는 거의 일대일로 하위 20%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성장이 촉진되면 빈곤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1970~90년 기간 동안 78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한 Norton (2002)의 연구에서도 경제성장이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소득과 삶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보였다.

Ⅲ. 연구방법과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추이

1. 분석 자료 개요와 소득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을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1979년~2005년)의 원자료를 기본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1998년~2004년)를 보조자료로 사용한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분위별 소득자료는 1979년부터, 원시자료는 1982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도시가계조사』는 횡단면자료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개별가구의 소득·소비 자료를 계속 추적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비농여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에 대해서만 세전소득을 조사 발표하고 있으나 2003년도부터는 조사 대상을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구 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도 소득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패널』은 1998년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04년도에 조사된 7차년도까지의 자료로 소득자료의 경우 실제 조사대상 연도는 1997년도부터 2003년까지이다.³⁾ 『노동패널』은 임금근로자를 주대상으로 하여 『도시가

3) 『노동패널』의 가구소득은 조사 년도의 이전 한해를 기준으로 조사된다. 다만, 1차년도 조사의 경우 응답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1〉 소득의 정의

통계청				LIS (또는 OECD)				
소득 (+)	비경상 소득	퇴직금, 연금일시금, 경조금, 비경상적인 보조금, 보상금, 손 해보험금 등		해당사항 없음				
	경상 소득	근로소득		compensation of employees	1차 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MI)	총소득 (gross income :GI)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 :DI)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cash income1)					
	공적	social insurance cash transfers + social assistance						
지출 (-)	비경상 지출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장 부담금 :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조 세		direct taxes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기타 비경상지출						
	소비 지출							

주 :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부양금, 양육비 등 기타 정기적인 현금소득임.

자료: 유경준·김대일(2003).

『제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가구와 1인가구도 표본에 포함하고 세후소득을 조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활용 가능성 및 유용성이 높지만 아직 자료 조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에 걸친 실증분석은 곤란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듯이 두 자료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년간 추세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에 분석대상을 도시 임금근로자가구로 한정하여 『도시가계조사』를 주된 분석 자료로 하고 『노동패널』을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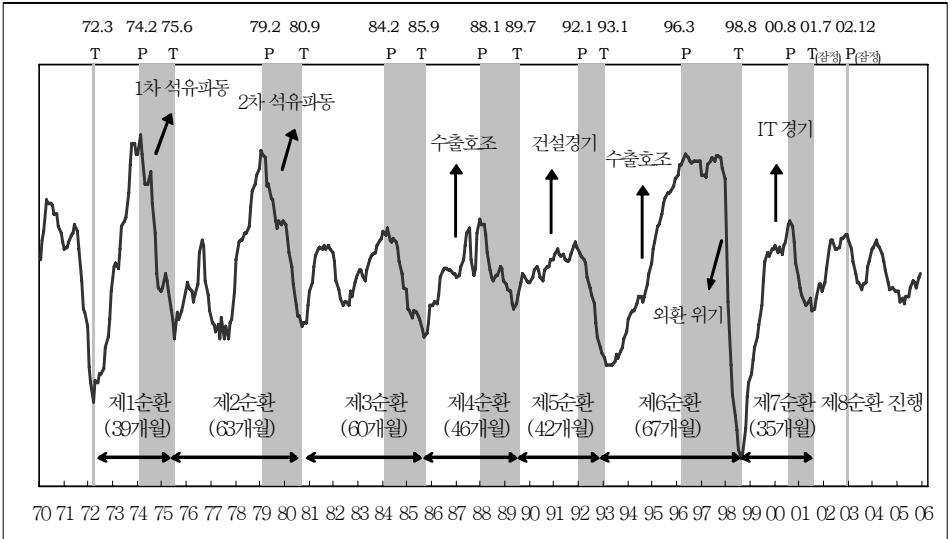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빈곤계층을 비롯한 소득계층을 구분하려면 소득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획득 형태나 소득의 발생원천, 조세 및 각종 공과금의 합산 또는 차감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차 소득(primary income), 시장소득(market income), 총소득(total income),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득개념(〈표 1〉 참조)을 사용하여 일관된 장기간 추세를 얻고 정부에 의한 가구소득 변화를 통제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경상소득에서 이전소득을 제외한 1차 소득 개념을 사용한다. 1차 소득은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있기 이전의 임금근로자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2.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구조 추이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분배와 빈곤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경기순환국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자. 통계청(2006b)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1970년대 이후 2002년 12월까지 총 8차례 경기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확장기(저점-정점)는 평균 31개월, 수축기(정점-저점)는 평균 18개월로 확장기가 수축기보다 더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기순환은 성장패턴, 정부정책⁴⁾, 외생적 충격 등에 의해 좌우된다. 성장패턴을 보면, 주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속에서 내수주도 성장패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8차례의 경기순환동안 1차 석유파동(1순환기), 2차 석유파동(2순환기), 외환위기(6순환기) 등 3차례 충격이 발생하였다. 1차 석유파동은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2차 석유파동은 국내 정치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발생하였으며, 외환위기는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가장 긴 경기수축국면을 보여주었다.

4) 1순환기는 8.3조치,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투자 및 수출이 경기를 주도 하였고, 3순환기는 안정화정책 추진으로 경기변동폭이 가장 적게 발생하였으며, 5순환기는 주택 200만호 건설 등으로 건설부문이 경기를 주도하였고, 2001년 이후 내수부양책 등으로 소비가 경기를 주도(가계버블 발생)하고 있다.

〈그림 1〉 우리나라의 경기순환국면⁵⁾



주 : 1) P는 정점(Peak), T는 저점(Trough)을 의미함, 2) 음영부분은 경기 수축국면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2006b).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계소득도 부침하는데, 특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계층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경기 수축기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실직가구의 가계소득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는 악화되지만, 경기 확장기에는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빈곤과 소득분배 상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과정을 『도시가계조사』의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 소득변화의 추이로 살펴보자.

먼저 1979년~2005년 동안 도시 임금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1차 소득의 전체 평균소득은 186만원에서 2,959만원으로 16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평균소득은 1979년 이래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기간(1998년)에는 예외적으로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직후인 1999년에는 전년대비 3.7% 증

5) 1998년 8월에 시작된 제7순환기부터는 경기사이클이 짧아지고 제8순환기 정점(2002년 12월) 이후의 사이클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2년 12월 이후의 경기사이클에 대해서는 삼성경제연구소(2006a)에서 발표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상의 정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한다.

가하여 2,008만원이 되었지만 1997년의 2,071만원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999년의 실질소득은 2,054만원으로 2,296만원이었던 1997년 수준에 비해 크게 낮지만 200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계층별 소득점유율 추이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0분위/ 1분위
1979	3.10	4.87	5.98	7.05	8.09	9.24	10.66	12.36	15.15	23.51	7.58
1980	3.06	4.85	6.09	7.14	8.17	9.29	10.61	12.30	15.06	23.42	7.64
1981	3.15	4.99	6.16	7.16	8.20	9.27	10.56	12.28	15.19	23.03	7.31
1982	2.93	4.92	6.10	7.06	8.07	9.13	10.48	12.20	15.12	24.00	8.19
1983	3.11	4.97	6.01	7.06	7.97	9.01	10.43	12.21	15.23	23.99	7.72
1984	2.98	4.89	5.97	7.06	7.98	9.15	10.46	12.34	15.16	24.00	8.04
1985	2.94	4.94	6.15	7.08	7.93	9.06	10.42	12.14	15.03	24.29	8.26
1986	2.94	4.91	6.17	7.09	8.04	9.07	10.53	12.32	15.16	23.77	8.10
1987	2.95	4.96	6.11	7.06	8.08	9.20	10.54	12.35	15.31	23.44	7.96
1988	3.11	5.08	6.18	7.08	8.04	9.16	10.53	12.23	15.11	23.48	7.54
1989	3.15	5.15	6.16	7.07	8.00	9.13	10.35	12.24	15.07	23.69	7.53
1990	3.21	5.29	6.27	7.18	8.16	9.21	10.52	12.28	15.08	22.80	7.10
1991	3.34	5.35	6.41	7.35	8.27	9.37	10.69	12.38	14.91	21.94	6.58
1992	3.28	5.39	6.47	7.47	8.43	9.50	10.78	12.50	14.91	21.29	6.49
1993	3.33	5.37	6.46	7.41	8.33	9.42	10.74	12.40	14.93	21.62	6.49
1994	3.36	5.30	6.39	7.37	8.40	9.48	10.84	12.55	15.04	21.26	6.33
1995	3.29	5.28	6.32	7.36	8.37	9.49	10.83	12.58	15.02	21.45	6.52
1996	3.15	5.09	6.25	7.29	8.31	9.52	10.83	12.73	15.40	21.44	6.82
1997	3.14	5.17	6.41	7.40	8.46	9.56	10.99	12.72	15.30	20.86	6.65
1998	2.65	4.85	6.09	7.23	8.30	9.52	11.03	12.86	15.55	21.92	8.28
1999	2.70	4.73	6.03	7.14	8.19	9.52	11.06	12.90	15.55	22.17	8.20
2000	2.82	4.79	6.01	7.18	8.29	9.52	11.00	12.74	15.37	22.29	7.91
2001	2.89	4.73	5.91	6.99	8.09	9.46	10.98	12.82	15.52	22.60	7.81
2002	2.96	4.75	5.94	7.05	8.21	9.44	10.84	12.78	15.48	22.55	7.61
2003	2.51	4.71	6.15	7.24	8.33	9.50	10.89	12.79	15.32	22.56	9.00
2004	2.35	4.52	5.96	7.16	8.31	9.57	11.02	12.80	15.51	22.80	9.68
2005	2.44	4.50	5.87	7.14	8.41	9.68	11.15	12.86	15.53	22.42	9.18

주 : 1) 음영부분은 경기 수축국면을 나타냄.
2) 경기순환국면은 통계청 (2006b) 과 삼성경제연구소(2006a) 에 의거하여 정의하였음.
자료: 통계청 (KOSIS).

이러한 소득변화의 정도는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차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눈 뒤 각 계층의 소득점유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자(〈표 2〉 참조).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은 전반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저소득층(1-3분위)과 중산층(4-8분위)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다가, 경제위기 이후에는 고소득층(9-10분위)의 소득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 구조를 소득 10분위 배율로 살펴보면, 우리 경제의 소득분배는 1980년대 초반까지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1990년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3저 호황기를 거치면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고 최저임금제(1988년)⁶⁾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 10분위 배율은 1985년에 최고치인 8.26을 기록한 후, 1994년에 6.33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이후 경기회복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종사상 지위별·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확대된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한국은행, 2006).

이러한 소득분배의 추이를 소득계층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대체로 증가하다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5·6분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 이하의 저소득계층에서는 점유율 감소, 그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는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에서는 소득점유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1분위의 경우에는 1990년대 전반기에 최고수준인 3.3%대의 수준을 보였지만, 경제위기 기간에 이르러 2%대로 하락하였다. 그 이후 예상보다 빨리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이 함께 증가하였지만,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는 다른 계층과 달리 2003년 들어와 소득이 오히려 9.6% 감소하였으며 2004년에

6)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6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 그 실시 근거를 규정했지만, 개발 독재 시기의 저임금 노동력 동원이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실사가 보류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1988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는 시행초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임금 양극화와 함께 비정규노동자의 노동빈곤화 문제에 대해 최저임금제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원오 외3인, 2005).

〈표 3〉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의 비중 추이

(단위 :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
1998	상용직	27.21	35.85	34.41	40.64	40.55	45.49	45.04	45.13	48.07	52.34	41.96
	임시직	9.33	4.96	6.05	5.39	2.68	4.39	2.12	4.65	3.44	1.70	4.35
	일용직	11.98	7.56	9.18	5.02	5.37	2.93	3.30	2.50	2.30	0.54	4.84
	비임금	2.62	3.95	2.05	2.09	2.77	3.30	4.41	3.47	5.57	4.93	3.59
	실업자	7.83	6.23	4.42	5.60	3.67	5.15	1.71	3.97	3.50	2.65	4.36
	미취업	41.03	41.47	43.89	41.26	44.97	38.74	43.42	40.28	37.13	37.84	40.90
1999	상용직	21.98	30.84	38.72	39.33	43.05	44.81	43.53	44.10	48.39	51.48	41.24
	임시직	12.69	8.85	7.79	8.01	5.86	5.40	5.98	5.65	5.39	4.33	6.81
	일용직	14.82	11.17	6.58	9.29	5.19	6.13	4.61	4.56	3.62	1.41	6.45
	비임금	2.04	3.63	2.99	1.48	3.66	2.98	4.50	3.18	5.19	3.17	3.34
	실업자	6.12	2.85	3.85	2.19	2.11	1.06	1.51	1.10	2.03	1.08	2.28
	미취업	42.35	42.67	40.08	39.69	40.14	39.62	39.87	41.41	35.38	38.54	39.88
2000	상용직	24.51	35.12	37.44	44.17	43.69	43.45	45.32	47.50	49.73	53.28	42.90
	임시직	10.77	7.85	4.62	6.31	6.33	2.59	4.84	3.64	4.05	3.51	5.32
	일용직	13.26	9.27	9.26	6.34	8.04	6.14	4.12	2.76	2.84	0.48	5.99
	비임금	2.62	3.35	2.10	1.86	2.86	3.17	3.63	2.93	4.79	4.80	3.27
	실업자	2.17	1.95	1.75	1.30	1.74	0.64	1.92	1.33	0.99	1.06	1.47
	미취업	46.67	42.47	44.83	40.02	37.34	44.01	40.17	41.83	37.60	36.88	41.05
2001	상용직	24.88	42.08	40.34	38.04	44.12	48.07	44.83	48.08	49.25	52.94	43.76
	임시직	9.14	5.49	6.12	5.91	5.47	4.73	6.05	4.95	6.46	3.03	5.67
	일용직	16.13	6.56	6.34	10.56	5.37	6.20	2.60	3.48	2.28	1.47	5.83
	비임금	1.76	2.10	1.27	2.34	3.84	3.63	3.64	2.98	3.12	5.05	3.05
	실업자	2.84	2.53	1.83	0.61	1.63	1.32	0.69	2.25	1.13	1.05	1.56
	미취업	45.25	41.23	44.10	42.54	39.57	36.05	42.18	38.26	37.76	36.46	40.14
2002	상용직	26.25	36.80	36.16	40.28	43.21	43.81	49.53	51.58	51.74	55.42	44.27
	임시직	9.24	5.47	7.79	5.50	6.96	4.76	4.85	4.96	4.02	4.11	5.63
	일용직	13.36	10.53	9.97	9.45	6.35	5.22	3.55	4.55	2.43	1.82	6.38
	비임금	0.43	2.55	2.14	2.97	1.75	4.54	2.14	4.28	4.72	4.12	3.05
	실업자	2.57	2.38	2.58	1.14	1.78	1.73	0.77	2.26	0.29	0.00	1.47
	미취업	48.14	42.28	41.36	40.65	39.96	39.93	39.16	32.37	36.80	34.53	39.20
2003	상용직	32.52	35.32	41.04	43.20	46.40	47.15	47.25	50.66	54.42	55.29	45.67
	임시직	6.03	6.16	6.62	5.53	5.04	5.67	7.08	3.27	5.06	4.11	5.49
	일용직	13.97	11.93	8.50	7.37	6.46	5.33	4.89	4.05	2.32	0.63	6.31
	비임금	2.05	1.97	0.89	1.07	3.08	2.95	2.22	5.91	3.52	4.76	2.90
	실업자	2.53	2.73	1.39	0.41	2.58	1.39	0.45	1.17	0.76	0.37	1.35
	미취업	42.89	41.89	41.57	42.42	36.45	37.50	38.10	34.94	33.92	34.84	38.28

주 : 『도시가계조사』 기준에 따라 가구주가 비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인 2인 이상의 가구에 속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자료임.

자료: 『노동패널』 1~7차 자료.

도 1.1%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2004년 소득점유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35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10분위의 경우에는 1980년대 후반에 24% 안팎의 수준을 보였으나 1990년대 들어 21%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최근에는 다시 22%대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점유율이 경기순환국면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동패널』자료로 소득계층별 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을 측정해보았다. <표 3>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의 비중은 상승하고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을 보면, 저소득계층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계층에서는 두 비중이 모두 전반적으로 낮지만 일용직보다는 임시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최근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침체가 저소득계층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다는 통상적인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의 변화를 경기순환국면과 연관시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일률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한 소득계층에서는 대체로 경기변동에 대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1분위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경기 수축기보다는 확장기에 소득점유율이 좀 더 높은 시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IV. 분배와 빈곤의 동태적 분석

1. 소득점유율 및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

앞에서 본 연구는 성장이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정태적인 수준(level) 보다는 변화율(rate of change)이라는 동태적 측면에서 접근하므로 소득점유율 또는 빈곤율 변

화에 따른 성장률탄력성 개념을 원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차이, 즉 동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유는 계층별 소득점유율과 빈곤율이 연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그로부터 경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미 앞선 분석결과에서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변화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득점유율이 실제 경기변동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두 시점 사이의 경제성장률 1%p 증가에 대한 소득점유율(또는 빈곤율)의 변화율을 의미하는 “소득점유율(또는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ϵ_H)” 개념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epsilon_H = \frac{\partial H}{\partial \mu} \frac{\mu}{H},$$

여기서 H 는 계층별 소득점유율(또는 빈곤율)을 나타내고, μ 는 경제성장(또는 평균소득)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지표는 실질국내총생산(GDP)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거시적 경제성장(=생산측면)과 미시적 가구소득(=가계소득측면) 분포의 변화가 소득계층별 소득점유율과 빈곤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경제성장지표를 실질국내총생산과 『도시가계조사』의 평균소득으로 구분하여 탄력성을 산출한다. 그리고 생산지표인 실질국내총생산은 『도시가계조사』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실질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생산액을 제외한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을 사용한다.⁷⁾ 생산측면의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과 도시가계소득의 증감속도⁸⁾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다만 경기 확장기인 1990년, 1993년, 2002년, 2004년 등의 4개년은 생산측면은 양(+)인 반면 가계소득은 음(-)으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소득계층별 실질소득의 소득점유율 변화율과 생산지표인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의 변화율을 사용하여 탄력성을 산출하였다.⁹⁾ 산출결과, <표 4>과 같이 소

7) 이와 같이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을 이용한 이유는 『도시가계조사』의 대상가구에 농림어업 종사자가 제외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생산액을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8) 전년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며, 거시적 경제성장의 증감속도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경기순환국면으로는 경기 확장기를,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경기 수축기와 일치한다.

〈표 4〉 계층별 소득점유율의 성장률탄력성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최저임금 인상률 ¹⁾	실질임금 증가율
1980	-0.92	-0.26	1.41	0.98	0.72	0.44	-0.34	-0.36	-0.41	-0.29	-	-4.11
1981	0.61	0.64	0.24	0.07	0.09	-0.05	-0.12	-0.03	0.19	-0.37	-	-0.55
1982	-0.99	-0.21	-0.13	-0.20	-0.22	-0.21	-0.11	-0.09	-0.07	0.56	-	8.00
1983	0.54	0.11	-0.14	0.01	-0.11	-0.12	-0.04	0.01	0.07	-0.00	-	7.36
1984	-0.45	-0.18	-0.07	-0.01	0.01	0.18	0.03	0.12	-0.05	0.00	-	6.29
1985	-0.21	0.16	0.43	0.05	-0.09	-0.14	-0.05	-0.25	-0.12	0.18	-	6.60
1986	-0.02	-0.06	0.02	0.01	0.13	0.01	0.10	0.14	0.08	-0.21	-	5.33
1987	0.03	0.09	-0.08	-0.04	0.04	0.11	0.01	0.02	0.08	-0.12	-	6.87
1988	0.54	0.22	0.11	0.03	-0.05	-0.04	-0.01	-0.09	-0.13	0.02	-	7.78
1989	0.14	0.19	-0.04	-0.02	-0.07	-0.05	-0.24	0.01	-0.03	0.12	19.5	14.58
1990	0.21	0.27	0.18	0.15	0.19	0.09	0.17	0.04	0.00	-0.38	5.9	9.43
1991	0.40	0.12	0.23	0.26	0.15	0.18	0.17	0.08	-0.12	-0.41	8.7	7.46
1992	-0.30	0.13	0.17	0.28	0.33	0.25	0.15	0.18	0.00	-0.55	6.2	8.45
1993	0.22	-0.04	-0.02	-0.12	-0.17	-0.12	-0.06	-0.12	0.02	0.23	3.7	7.04
1994	0.11	-0.15	-0.13	-0.05	0.10	0.07	0.11	0.14	0.08	-0.19	2.2	6.06
1995	-0.24	-0.04	-0.12	-0.03	-0.04	0.01	-0.01	0.02	-0.01	0.10	4.1	6.43
1996	-0.64	-0.54	-0.17	-0.13	-0.10	0.04	-0.00	0.17	0.35	-0.01	4.0	6.65
1997	-0.05	0.36	0.56	0.35	0.38	0.08	0.32	-0.02	-0.14	-0.60	5.1	2.46
1998	2.38	0.89	0.72	0.33	0.26	0.06	-0.05	-0.16	-0.23	-0.69	-1.0	-9.31
1999	0.23	-0.29	-0.10	-0.14	-0.15	0.01	0.03	0.03	0.00	0.13	0.3	11.18
2000	0.48	0.15	-0.05	0.08	0.15	-0.01	-0.06	-0.15	-0.14	0.06	3.1	5.63
2001	0.70	-0.29	-0.40	-0.72	-0.65	-0.15	-0.03	0.15	0.26	0.36	12.2	1.48
2002	0.32	0.05	0.07	0.13	0.20	-0.03	-0.19	-0.04	-0.03	-0.03	9.6	8.66
2003	-4.95	-0.23	1.00	0.77	0.45	0.19	0.16	0.03	-0.30	0.01	4.7	5.69
2004	-1.39	-0.91	-0.70	-0.25	-0.06	0.15	0.26	0.01	0.27	0.24	6.5	2.75
2005	0.91	-0.15	-0.36	-0.05	0.30	0.29	0.28	0.12	0.03	-0.42	9.8	3.62

주 : 1) 소비자물가지수(2000년 기준)로 환산한 실질임금 기준 인상률임.

2) 음영부분은 경기 수축국면을 나타냄.

3) 1980년과 1998년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소득점유율의 관계를 반대로 해석해야 함.

자료 : 통계청(KOSIS),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9) 성장 지표로 가계소득을 사용할 경우, 특정 년도를 제외하면 생산측면 지표로 사용한 성장률 탄력성과 부호는 같고 대체로 그 절대적 수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득계층에 따라 경기변동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대체로 2-9분위에서는 경기 확장기에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수축기에 감소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양극단의 소득계층보다 약하고 반대의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1992년은 경기 수축기임에도 불구하고 2-9분위의 소득점유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실질임금의 상승과 지속적인 고성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중위소득계층을 기준으로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과 5분위 이하의 소득계층이 양분되어 2002년 경기 확장기에는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상승하고 5분위 이하의 소득계층은 하락했으며, 그 다음 확장기인 2004년에는 반대로 5분위 이하 소득계층의 소득이 상승하고 6분위 이상의 소득계층은 하락하는 ‘시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고용이 불안해지고 고용형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소득계층의 양극단인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는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점유율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최저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은 대체로 경기 확장기에 증가하고 수축기에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기 순응적(pro-cyclical)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최고소득계층은 경기 확장기에 감소하고 수축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이다. 최저소득계층의 경우, 경기순환과 역(-)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시기도 존재하는데, 이는 최저임금이나 실업률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1988-89년은 경기 수축기임에도 불구하고 탄력성이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에 힘입은 3%대의 낮은 실업률과 당시 도입된 최저임금제와 실질임금의 상승 등으로 경제 호황의 결실이 저임금 노동자에게도 돌아갔기 때문(trickle-down effect)인 것으로 판단된다.¹⁰⁾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비정규직의 증가와 같은 노동시장구조의 전반적인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최저임금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 수준은 열악해지고 이는 1998년 경제위기로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6분위까지 소득점유율은 감소하지만 다른 소득

10) 참고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영향률(=수혜근로자 수/적용대상 근로자수)은 평균 4.1%이지만, 1989년에는 그 수치가 1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991, 1992년으로 각각 8.6%와 8.5%를 기록하였다.

계층보다 1분위 소득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경제위기가 주로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은 점차 개선되는 듯하다가, 2003년 이후 다시 악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제성장률과 빈곤율간의 관계를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으로 살펴보자. 탄력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본래 빈곤은 소득이나 여타의 기준이 되는 변수의 값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일반적으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상대빈곤은 기준소득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기준소득으로 중위소득(median income) 또는 평균소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분포에 따라 빈곤선이 계속 달라진다. 절대빈곤은 소득수준이 사전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의되는데, 기준소득 수준은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준소득인 최저생계비를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절대빈곤율을 구하려면 1999년 이전의 최저생계비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82년부터 1998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와 『노동패널』 자료에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계속연도인 1999년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여 빈곤선을 추계한다. 아울러 1인 가구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노동패널』 자료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계조사』와 일관된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하기 위해 농어가 가구를 제외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2인 이상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¹¹⁾

먼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198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12.1%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그 이후 점차 하락하여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선까지 떨어졌다.¹²⁾ 1980년대

11)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소득을 '세전소득'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 『노동패널』은 '조세'를 제외한 '세후소득'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동패널』의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부동산소득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세후소득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앞에서 정의한 1차소득의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12) 1999년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 물가조정을 하여 빈곤선을 설정한 결과,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1982년 빈곤율은 78.7%에 이르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87년에는 44.5%선까지 하락한다. 1980년대의 이와 같은 높은 빈곤율은 본 연구와 다른 기

후반인 1988~89년은 경기순환의 수축기인데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실업률과 더불어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로 인한 저소득가구의 실질임금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빈곤가구에서의 가구소득은 자산이나 자본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도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전반적인 실질임금의 상승은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라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은 6~7%선을 유지하다가, 1998년 경제위기 직후 절대빈곤율은 13.5%로 급상승하였다. 이후 절대빈곤율은 낮아지는 듯하였으나 2003년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¹³⁾ 한편, 『도시가계조사』의 측정결과와 비교를 위해 가구주가 비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인 2인 이상의 가구로 정리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빈곤율은 『도시가계조사』에서 보다 절대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유사한 추세를 보여 1998년 13.95%에서 2002년까지 6%선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 7.2%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다.

이러한 빈곤율에 생산지표인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을 이용하여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을 산출한 결과(〈표 5〉의 탄력성1), 1989년의 탄력성이 -2.58로서 경제성장률이 1%p 변화에 따라 빈곤율은 2.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는 생산측면 경제성장의 효과가 빈곤층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시 낮은 실업률, 최저임금제의 시행초기 높은 인상률 그리고 실질임금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 탄력성의 값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의 빈곤감소 효과는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인 1990년대 중반인 1995~96년에는 그 효과가 각각 0.06로 양(+)의 값으로 역전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경제위기 이전인 1995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

준(=경상소득, 총소득, 지출기준 등)으로 빈곤율을 산출한 이상은(2006)의 연구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측정결과들은 상식선에서 너무 벗어나 측정방법 및 해석에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 13) 여유진 외 4인(2005)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기준 1996년~2004년까지의 절대빈곤율을 보면, 1999년 이전에는 본 연구의 측정결과보다 낮은 반면에,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높았다. 동일한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사용했음에도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자료 추출방법의 차이와 여유진 외 4인(2005)의 가구균등화지수 사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14) 참고로 농림어업 생산액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지표를 사용하여 탄력성을 산출해본 결과, 〈표 5〉의 탄력성 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본문에서는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을 사용한 탄력성을 제시하였다.

〈표 5〉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

	성장률		빈곤율		탄력성1		탄력성2	
	생산측면 증가율 ¹⁾	가계소득 증가율 ²⁾	가계조사	노동패널	가계조사	노동패널	가계조사	노동패널
1988	10.87	9.21	12.10	-	-	-	-	-
1989	7.44	15.65	9.78	-	-2.58	-	-1.23	-
1990	10.45	7.42	9.53	-	-0.24	-	-0.34	-
1991	9.91	11.54	9.12	-	-0.43	-	-0.37	-
1992	5.65	10.51	8.35	-	-1.49	-	-0.80	-
1993	6.95	4.95	7.71	-	-1.10	-	-1.55	-
1994	9.02	7.29	7.25	-	-0.66	-	-0.82	-
1995	9.38	8.44	7.29	-	0.06	-	0.07	-
1996	7.25	6.99	7.32	-	0.06	-	0.06	-
1997	4.65	1.07	6.73	-	-1.73	-	-7.53	-
1998	-6.88	-13.03	13.45	13.95	-14.51	-	-7.66	-
1999	9.67	2.89	9.32	11.22	-3.18	-2.02	-10.63	-6.77
2000	8.84	4.56	5.16	10.78	-5.05	-0.44	-9.79	-0.86
2001	3.96	5.87	4.39	6.67	-3.77	-9.63	-2.54	-6.50
2002	7.43	4.87	3.72	6.26	-2.05	-0.83	-3.13	-1.26
2003	3.43	3.21	4.31	7.20	4.62	4.38	4.94	4.68
2004	4.57	1.60	5.08	-	3.91	-	11.17	-

- 주 : 1) 생산측면의 성장지표인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의 변화율을 의미함.
 2) 가계소득의 성장지표인 『도시가계조사』의 평균소득의 변화율을 의미함.
 4) 음영부분은 경기 수축국면을 나타냄.
 5) 탄력성1에서 μ 는 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을 제외한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이며, 탄력성2에서 μ 는 『도시가계조사』의 평균소득을 의미함.
 6) 1998년 경제성장률이 -6.8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성 해석에 유의해야 함.

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및 『노동패널』 1~7차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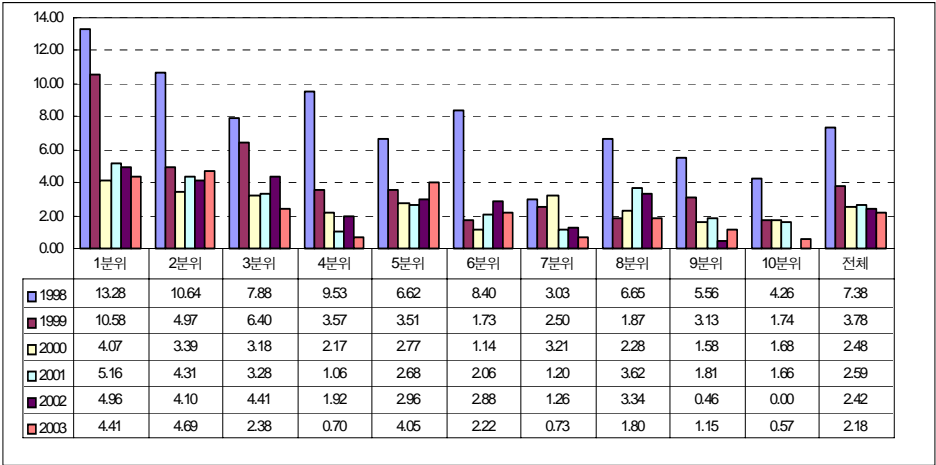
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2년간의 저소득계층의 소득 감소에 따른 반등효과로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탄력성값은 -1.73로 산출되어 다시 소폭의 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제성장률은 -6.88%를 기록하고 빈곤율도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탄력성은 -14.51로 나타나, 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함에 따라 빈곤율은 오히려 14.51%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다시 경제성장에 따른 빈곤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2003~04년에는 다시 탄력성이 양(+)의 값으로 반전되어 각각 4.62, 3.91을 기록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회복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이 경제위기 이전 시기에 비해 약화되고(삼성경제연구소, 2006a), 중간 수준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자리에서는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전병유 외 2인, 2006)와 실질임금 증가율의 감소 등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장지표로 가계소득이 사용된 탄력성(<표 5>의 탄력성2)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예외적인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생산측면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가계소득을 이용한 탄력성이 생산측면의 경제성장률의 그것보다 절대적 크기에 있어 더 크게 나타나고 부호는 동일하다. 또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그 절대적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결과는 동일하다.

이제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을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살펴보면, 대체로 경기순환국면과 관계없이 음(-)의 값을 지니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물흐름 효과(trickle-down effect)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경기 수축기보다 경기 확장기에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그 효과가 사라졌는데, 이는 빈곤율 감소가 경제성장 외에도 실업률이나 고용안정성과 같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실업률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보았다. <그림 2>에 따르면, 실업률은 저소득계층에서 고소득계층으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그림 2〉 소득계층별 실업률 추이

(단위 : %)



주 : 『도시가계조사』 기준에 따라 가구주가 비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인 2인 이상의 가구에 속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자료임.

자료: 『노동패널』 1~7차 자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은 감소하여 2000년에 최저인 4.07%로 하락하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소득계층은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경기변동이 소득계층별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근 일부에서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고용 없는 성장”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성장만으로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청와대, 2006). 이에 반해 김용현(2005)은 전반적으로 고용흡수 여력이 낮아지고 있으나 시차와 외부적 충격을 고려한 중장기적 평균 고용탄력성은 양(+)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상은(2006)은 1980-90년대를 걸쳐 우리나라에서 거시경제성장이 빈곤감소와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 그 효과는 줄었지만 여전히 빈곤 감소에 주요한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소득점유율 및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 추정결과를 통해 일부 실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제 경제성장의 변화, 즉 경기변동이 과연 각 소득계층별 실질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샘플규모가 작고 변수들간의 내생성 문제로 편의(bias)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Stock and Watson(1993)에 의해 제안된 동태적 최소자승법(Dynamic Ordinary Least Square)¹⁵⁾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자료로써 『도시가계조사』의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과 실질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생산액을 제외한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 변수를 사용하는데, 양 변수는 확률보행과정(random walk component)을 따르고 공적분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

15) 동태적 최소자승법은 기존의 통상최소자승법이 변수들간의 내생성 문제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모형에서 단기적인 효과와 공적분 효과에서 나타나는 장기적 효과를 결합하고 있어 단기 동태적인 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변수의 장기적인 균형으로서의 점진적인 조정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elta \ln y_t = \beta_0 \Delta \ln GDP_t + \beta_1 \Delta \ln GDP_t^{*} BC + \beta_2 \Delta \ln y_{t-1} + \beta_3 \ln y_{t-1} + \beta_4 \ln GDP_{t-1} + \epsilon_t$$

단, y :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GDP :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 BC : 경기변동터미 (확장기=1)

〈표 6〉분위별 회귀분석 결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DGDP	1.682*** (7.376)	1.223*** (6.540)	1.116*** (5.623)	1.106*** (6.502)	1.080*** (7.389)	1.075*** (7.616)	0.994*** (6.984)	1.017*** (7.177)	0.978*** (7.422)	0.848*** (6.591)
DGDPBC	0.569** (2.402)	0.161 (1.173)	0.236* (1.790)	0.120 (0.925)	0.161 (1.357)	0.091 (0.509)	0.153 (1.295)	0.129 (0.898)	0.113 (0.906)	0.035 (0.271)
DY(-1)	0.075 (0.877)	0.309*** (3.816)	0.307*** (5.553)	0.315*** (5.373)	0.295*** (4.374)	0.263*** (4.502)	0.275*** (5.457)	0.226*** (3.168)	0.205*** (2.616)	0.164 (1.627)
Y(-1)	-0.138 (-1.479)	-0.094 (-1.522)	-0.125*** (-2.687)	-0.119*** (-2.99)	-0.124*** (-3.449)	-0.120*** (-4.011)	-0.103*** (-3.691)	-0.100*** (-3.305)	-0.078*** (-3.009)	-0.042* (-1.780)
GDP(-1)	0.135 (1.399)	0.096 (1.478)	0.132*** (2.662)	0.127*** (2.96)	0.134*** (3.422)	0.131*** (3.976)	0.114*** (3.658)	0.111*** (3.244)	0.087*** (2.95)	0.049* (1.762)
R^2	0.77	0.79	0.78	0.81	0.82	0.81	0.84	0.78	0.76	0.60
D. W.	1.77	2.24	2.29	2.28	2.25	2.39	2.26	2.54	2.61	2.59

주 :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 유의수준하며, () 안 t 값임.
자료: 통계청 (KOSIS).

추정모형에 의해 계산된 소득계층별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성장이 소득증가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비농가 실질국내총생산 로그값의 1차 차분한 값(DGDP)의 추정계수는 약 0.848-1.682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회귀계수값은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계수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최저소득계층에서 경제 성장에 따른 단기적 효과가 가장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즉,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의 추정 회귀계수는 1.682로 이는 비농가 국내총생산이 1%p 상승하게 되면 1분위의 소득은 1.682% 증가함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성장률 효과가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어떻게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DGDP×경기변동터미의 상호작용변수(DGPBC)를 사용한 결과, 1분위와 3분위에서 회귀계수가 각각 0.569, 0.236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졌다. 이는 경기 확장기에 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3

분위의 소득 탄력성은 다른 계층에 비해 더 커지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분위 소득탄력성은 0.569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앞에서 분석한 1분위의 소득점유율이 경기 순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경기성장에 따른 효과는 모든 소득계층에게 있지만 그 효과는 저소득계층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성장에 따른 물흐름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효과는 경기 확장기일 때 더욱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도시가계조사』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점유율 및 빈곤율의 성장률탄력성을 측정하고, 경기변동의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은 경제위기로 인해 예외적으로 감소한 기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추세는 소득계층별과 경기순환국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와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의 실질소득 또는 소득점유율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두 계층은 경기변동에 따라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최저소득계층인 1분위 소득과 소득점유율은 대체로 경기 확장기에 크게 증가하고 수축기에는 감소하는 경기 순응적(pro-cyclical)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최고소득계층인 10분위는 경기 확장기에 소득증가율이 다른 계층보다 작아 소득점유율이 감소하고 수축기에 소득점유율이 증가하는 경기 역행적(counter-cyclical)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은 경기 확장기의 소득증가율과 수축기의 소득감소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저소득계층인 빈곤계층의 성장탄력성은 1988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탄력성은 음(-)으로 산출되어 경제성장의 효과가 빈곤계층까지 확산되고 있었지만(trickle-down effect), 1990년대 중반인 1995-96년 경제성장률의 감소와 함께 탄력성은 양(+)의 값으로 역전되었다. 그 이후 소폭의 경제성장에 따른 효과가 저소득층에 영향을 주었지만 경제위기로 인하여 다시 소멸되는 양상을 보였다. 경제위기 이후 다시 경제성장의 빈곤 감소효과가 나타났으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

라 2003년 이후 다시 그 효과는 사라졌다. 이는 1분위 계층의 높은 실업률과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경제성장과 소득계층별 실질소득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경제성장은 모든 소득계층에게 양(+)의 효과로 유의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변동더미와 경제성장과의 상호 작용변수를 사용한 결과, 경기 확장기일 때 저소득계층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의 변수가 저소득계층의 소득변화에 중요하고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에 근거할 때 경기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저소득계층의 소득감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진다.

■ 참 고 문 헌

1. 강석훈, “양극화의 오해와 남용 - 소득 양극화를 중심으로,” 『양극화의 왜곡과 허구: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한다』,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 2006.
2. 금재호 · 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2001.
3. 김준영 · 이광호, “경기변동의 소득 및 소비 불평등 파급효과,” 『재정논집』, 제18집 제2호, 2004.
4. 김용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가?,”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3호, 2005.
5. 삼성경제연구소, “경기회복기의 일자리 창출력 분석과 2006년 일자리 창출 전망,” 『SERI 경제포커스』, 2006a.
6. _____,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제547호, 2006b.
7. 선진화국민회의, “특별기획시리즈: 양극화,” www.gosunjin.org, 2006.
8.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5.
9. 안종범, “한국경제 발전모형의 정립을 위한 쿠즈네츠 가설의 재검토,” 『경제학 연구』, 제51집

제 3호, 2003.

10. 여유진 외 4인,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11.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12. 이상은, “우리나라에서의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 - 1982~2004년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4대 사회보험과 Governance - 재정 및 관리운영체계를 중심으로』, 2006 한국사회보장학회 전반기 학술대회, 2006.
13. 전병유 외 2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
14. 정원오 외 3인,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진보정치연구소, 2005.
15. 청와대,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 www.president.go.kr, 2006.
16. 통계청, “2006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2006a.
17. _____, “경기종합지수 개편 및 기준순환일 설정,” 통계청, 2006b.
18. 한국은행, “소득분배구조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2006년 4월호, 한국은행, 2006.
19. Adelman, I. and C.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1973.
20. Ahluwalia, M., “Income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Some Stylized Facts,” *American Economic Review*, 66, 1976.
21. Dollar D. and Kraay A, “Growth is good for the poor,” *Journal of Economic Growth*, 2002.
22. Ellwood, D.T., *Poor Support-Poverty in the America Family*, Basic Books, 1988.
23. Fields, Gary S. and George H. Jakubson, *New Evidence on Kuznets’ Curve*, Cornell University, 1994.
24. Fields, Gary S.,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A New Look at Developing World*, Russel Sage Foundation and MIT press, 2000.
25. Förster, M.F.,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No. 42, OECD Publishing, 2000.
26. Förster, M.F. and Marco Mira d’Ercole,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2, OECD, 2005.
27. Kravis, I.,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60.
28. Kuo, Shirley, Gustav Ranis and John C.H. Fei. *The Taiwan Success Story: Rapid with Improved Distribution in the Republic of China*, Boulder: Westview, 1981.
29. Kuznets, Simon,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Vol. 11, No. 2, 1963.
30. Norto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In Search of Trickle-Down,” *The Cato Journal*, Vol. 22, No. 2, 2002.
31. Papanek, G. and O. Kyn, “The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of Development, the Growth Rate and Economic Strateg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23, 1986.

32. Paukert, F., "Income Distribution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International Labor Review*, 108, 1973.
33. Saith, A.,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 Critique of the Cross-Country U-Hypothe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3, 1985.
34. Stock, J.H. and M. Watson, "A Simple Estimator of Cointegration Vectors in Higher Order Integrated System," *Econometrics*, Vol. 61, 1993.
35. Tsakoglou, P., "Development and Inequality Revisited," *Applied Economic*, Vol. 20, 1988.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Cycle, Distribution and Poverty

Chong-Bum An* · Byung In Lim** · Sang Hun Seok***

Abstract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business cycle on real income according to class in terms of the measurement of elasticities of income shares by class with respect to the economic growth rate. We use two micro data sets of the Urban Household Survey and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or the estimation. The first empirical finding from the estimation shows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continued to increase despite an exceptional period of decrease due to the economic crisis which occurred in 1997, and the trend shows th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business cycle. The second finding indicates that the lowest income class, the first decile income share, becomes pro-cyclical, while the highest income class, i.e., the 10th decile income share is counter-cyclical, implying that the effect of the overall economic growth is diffused throughout the poorest class. The third finding shows a more important implication that the lowest income class appears to be more sensitive to business cycle factors such as economic growth and unemployment rate than other income classes. In conclusion, the deterioration of income distribution can be resolved mainly by a job creation policy initiated through economic revitalization.

Key Words: kuznets hypothesis, growth and Inequality, growth elasticities of income share and poverty, business cycle and poverty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